

말 한마디로 민원 접수 끝 행안부, AI로 주민 일상 더 편리하게

- '2026년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 5개 과제 최종 선정
- 고령층 돌봄, 안전·건강관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추진

-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함을 해결하는 '디지털 민생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 (이하 '공감e가득 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5개 과제를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공감e가득 사업'은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추진해 온 사업으로, 주민과 지방정부, 기업이 협력하여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로 지역 문제를 직접 푸는 대표적인 주민체감형 사업이다.
 - 그동안 제주도의 'QR코드 안심주차 서비스'나 '하남시의 인공지능(AI) 기반 불법 오토바이 단속 시스템'처럼 생활 속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왔다.
- 올해는 고령층 지원, 안전관리, 건강관리 서비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접목한 5개 해결 과제가 집중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전통시장 등 화재에 취약한 지역에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소화기를 설치한다. 소화기의 위치와 압력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제때 작동하지 않는 소화기를 미리 점검·교체하고 화재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충청남도 천안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축한다. 주민이 스마트폰으로 구강 상태를 찍으면 인공지능(AI)이 이를 전신 건강 정보와 함께 분석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예측하고, 분석 결과는 지역 의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 경상북도 영천시는 어르신들의 행정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복잡한 행정정보를 짧고 이해하기 쉬운 영상으로 바꿔주는 ‘인공지능(AI) 숏폼 영상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제작된 영상은 경로당의 스마트TV로 송출되어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경상북도 영덕군은 대표 관광지인 ‘블루로드’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치정보(GPS)를 연동한 모바일·웹 기반 점검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장 제보부터 보수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기록·관리하여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 경상남도 하동군은 소규모 수리를 돕는 ‘별천지빨리처리기동대*’에 인공지능(AI) 음성 기반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접목한다. 기존의 전화나 말로 전하던 방식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주민이 일상 언어로 민원을 말하면 인공지능(AI)이 민원 내용과 위치를 자동으로 인식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현장에 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하동군이 운영하는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로, 전등·콘센트·수도꼭지 교체 등 소규모 수리·정비를 군민이 콜센터로 접수하면 현장에 출동해 신속히 처리하는 전담팀

□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각 과제에 1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 또한, 오는 4월 9일(목)에 과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착수보고회를 열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

-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일상화 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공공 서비스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민간협력공동체과	책임자	과 장	홍정우 (044-205-3171)
		담당자	사무관	서경희 (044-205-3187)

